

## 지방자치·종합

광주시·전남도의회 올 회기 마무리

## 의욕적인 활동… 성과는 기대 밖

엄격해진 예산심사, 편법 유급보좌관제 물의

F1 의혹 해소 노력 불구 '면죄부 감사' 지적

초선이 다수로 위상 변화를 예고했던 민선 5기 제6대 광주시의회와 제9대 도의회가 23일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대다수 초선인 탓에 의욕적 활동이 둘보였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시·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6대 시의회는 전반적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편법 유급보좌관제 도입 강행'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회기동안 이은방 의원

(민주·북구 6)이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 제·개정을 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호권(민주·북구 5) 의원과 강은미(민노·서구 4) 의원 등 6명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학교급식 관련 등 30건의 질의를 벌였다.

우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다선 의원들의 관리를 두드려졌고, 초선 의원들은 과거 시의회와 비교해 '성역없는' 감사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긍정적 평가

를 받았고, 부당인 시설의 관리·감독 허술 등 통상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2011년 예산 심의에서도 느슨했던 과거와 달리 선심성·일회성·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삼감하는 등 심의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86억원의 예산을 삼감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 등을 통해 의회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

지만, 집행부 눈치보기식 예산안 심사 등은 아쉬움으로 풀고 있다. 도의회는 회기동안 조례안 57건, 동의·승인안 1건, 건의·결의안 19건, 예산·결산안 9건, 규칙 2건 등 모두 10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3건, 주의 10건, 개선 50건, 권고 219건, 건의 8건 등 모두 300건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했다.

도의회는 특히 F1 코리아 그랑프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주장 건설 지역에 따른 부실 공정 관리 및 대회 수익 구조 참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회 이후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을 해소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도 행정과 예산 편성과 관련해 '허술한' 예산편성이란 목청을 높였다가도 정작 어울쩍 통과시키고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데 앞장서 도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 이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F1 대회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권일·김지기자 cki@



## 사상 최대규모 화력 훈련

23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10 동계 공지합동훈련이 열렸다. 한 군부대에서 K-9 자주포들이 위력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청사 3시간 넘게 출입문 봉쇄

도의회, 시민단체 진입 저지

민원인·배달원 등 불편 소동

전남도의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다.

이로 인해 F1 대회 미확보 국비를 도비로 확충하는 예산안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도의회를 찾았던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도의회 출입을 막았다면서 "택배 배달원이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까지 들어갈 수 없어 수십 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F1 대회 관련 의혹과 실체에 대한 범도민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소

사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속 회원들은 "기자회견과 촉구서한 전달을 마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도청 1층 쉼터에 가려고 했을 뿐인데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았다"면서 "택배 배달원이나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까지 들어갈 수 없어 수십 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 姜시장-시의원 설전, 도의회는 결의문

## 광주-무안공항 갈등 확산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더라도 간척지를 준설해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는

'이전하더라도 대체로 간척지를 준설해 새로

운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는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책임인데

국방부가 책임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에 공

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반박이 이어지자 송 의원이

의석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강 시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문제

와 관련해 광주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동안 국방부장관을 4차례 만나 국 공항 문제를 협의한 결과

공항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교통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근시 안적 행정을 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23일 제 25회 제 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국제공항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영덕(무안 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광주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광주·무안공항이 조속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것 ▲정부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호남고속 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2014년까지 완료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권일·김지기자 cki@

복지예산 대폭 삼감한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관광 성격이짙은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23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조유송 의장과 총무위원회 의원 4명 등 군의원 5명은 오는 27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의 행정기관과 유적지, 공공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고 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의 언덕, 피사의 사탑, 스칼라극장, 스위스의 응프리우 등 대부분의 일정이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진 이전에는 다연장로켓과 자주 대공포 '비호', AH-1S 공격헬기, 500 MD 헬기, 대전차미사일(METIS-M), F-15K 전투기 2대, KF-16 전투기 4대 등 105종류의 무기와 병력 8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같은 도발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병례 이어(AN/TPQ-36)를 투입, 북한의 포격 상황을 가정해 K-9 자주포가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

## ‘진돗개 하나’서 ‘둘’로… 軍, 대비태세 일부 완화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군은 적의 주가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다면, 서해 연평부대 사격과 애기봉 점등식 간 적의 도발에 대비해 격상한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는 부분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이 서북도서와 전방지

“상무지구 전역 소각장 영향”

김보현 시의원 고시 주장

## 화순군 의원들 관광성 해외연수 추진 눈총

김보현(민주·서구 2) 광주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전 지역이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영향권이 300m 이내 지역과 300m 이상 주거지역 간의 (오염 정도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무지구 전 지역이 동일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광주시가 포항공대의 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300m 이내에 영향지역 고시를 종용하는 것은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무안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강 운태 광주시장이 23일 광주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전남도의회는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운태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 폐회식에서 송경종(민주·광산 3) 시의원의 '광주공항·군 공항 동시 이전 추진' 5분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목록이의를 제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동안 국방부장관을 4차례 만나 국 공항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에 강 시장은 "소통의 문제로, 사실과 내용이 달라 답답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송경종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공항은 2014년 KTX가 개통되며, 이용객 수요가 대폭 줄어 공항 기능을 제대로 뜯 할 것"이라며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의 2025년 장기 도시계획 속에 광주공항 이전 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 2011년 예산에 광주

도의회는 결의안을 제기했다.

23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조유송

의장과 총무위원회 의원 4명 등 군의원 5명은 오는 27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의 행정기관과 유적지, 공공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고 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의 언덕, 피사의 사탑, 스칼라극장, 스위스의 응프리우 등 대부분의 일정이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김보현 의원 고시 주장

김보현(민주·서구 2) 광주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전 지역이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영향권이 300m 이내 지역과 300m 이상 주거지역 간의 (오염 정도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무지구 전 지역이 동일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광주시가 포항공대의 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300m 이내에 영향지역 고시를 종용하는 것은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무안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공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강 운태 광주시장이 23일 광주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전남도의회는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운태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 폐회식에서 송경종(민주·광산 3) 시의원의 '광주공항·군 공항 동시 이전 추진' 5분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목록이의를 제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동안 국방부장관을 4차례 만나 국 공항 문제를 협의한 결과

이에 강 시장은 "소통의 문제로, 사실과 내용이 달라 답답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송경종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공항은 2014년 KTX가 개통되며, 이용객 수요가 대폭 줄어 공항 기능을 제대로 뜯 할 것"이라며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의 2025년 장기 도시계획 속에 광주공항 이전 계획은 들어 있지 않고 2011년 예산에 광주

도의회는 결의안을 제기했다.

23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조유송

의장과 총무위원회 의원 4명 등 군의원 5명은 오는 27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의 행정기관과 유적지, 공공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고 의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의 언덕, 피사의 사탑, 스칼라극장, 스위스의 응프리우 등 대부분의 일정이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김보현 의원 고시 주장

김보현(민주·서구 2) 광주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전 지역이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영향권이 300m 이내 지역과 300m 이상 주거지역 간의 (오염 정도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무지구 전 지역이 동일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광주시가 포항공대의 영향조사 결과를 수